8. 환경 분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EU('19.12월), 중국('20.9월), 일본('20.10월), 미국('21.1월)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21.9월)도 탄소중립 선언에 합류했다. 특히 EU는 고탄소 제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탄소무역 장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제조업 비율로 인해 고탄소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설비전환, 녹색금융, R&D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7년까지 전체 배출권 할당업체('22년 기준 684개)에 대해 모두 설비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배출가스 감축 의무는 없으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탄소 감축을 요구 받는 중소·중견기업 등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전환·친환경 설비투자 등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채권·이차보전·직접융자·펀드 등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녹색금융도 대폭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 및 탄소저감 공정 기술개발, 수소 등 대체 에너지원 활용 고도화 기술 등 혁신 R&D를 통해 2030 NDC 달성을 위한 선도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 경쟁력 중심 무공해차 보급 확대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수소·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글로벌 시장 內 경쟁력이 높은 수소 상용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편리한 전기·수소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거점인 거주지와 직장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기 이상 구축하고, 이동거점인 고속도로 등에 20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하되, 주민 수용성과 운영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주된 배치전략으로는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과 인접지역에 우선 구축하고 6대 광역시와 고속도로, 주요 도시 등에 전국적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로는 LPG·CNG 충전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유휴부지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표상 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상승하였으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으로 폐기물은 지속 증가하고, 특히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급증하고 있으며, 복합재질 제품, 이물질 혼입 등 재활용 저해요인이 늘어나고, 선별장 대다수가 수선별에 의존(선별률 62.9%)하여 고품질 재활용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 폐기물량(만톤/년) : ('16년) 15,663 → ('18년) 16,283 → ('20년) 19,546
- '20년 기준 전년 대비 ①폐플라스틱류 18.9%, ②폐비닐류 9% 증가

이에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폐기물 원천감량, 선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상황 속 홍수대응 강화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서울 집중호우, 2020년 8월 남부지방 홍수, 2022년 8월 서울 도시침수 등 국토 전역에 침수 및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단적 강우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22.8)」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및 하천범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국가하천 · 지방하천 · 소하천, 본류 · 지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수위 · 유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 한강 유역 침수위험지도 제작(~'23년) 등 스마트 홍수 예보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주요 침수지역에 대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총사업비 6,000억원)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통수(通水) 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용량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속화 등 투자를 확대한다.